

# 이카루스의 추락을 방지할 제품안전기본법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발표



STANDARDS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안전감시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Safety Guard' 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계획했다. 이 제도를 제품 자체에 확대 적용해 임의표준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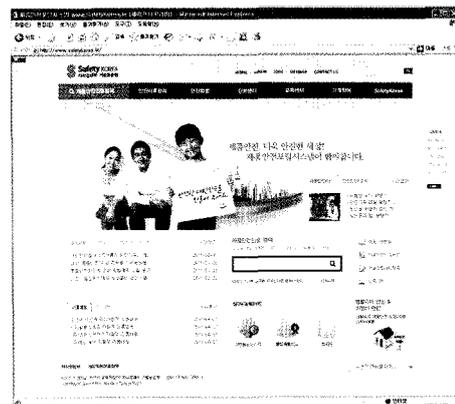
2009년 8월 가속페달 문제를 시작으로 연간 판매대수인 1300여만 대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리콜해야 했던 도요타사태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 추락했던 그리이스 신화 속 이카루스(Icarus)를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뛰어난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크레타왕 미노스의 감옥에 갇힌 이카루스는 다이달로스가 새의 깃털과 땀샘으로 만든 날개를 이용해 탈출했다. 그러나 다이달로스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것에 도취되어 점점 높이 날아오르던 이카루스는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에게해에 떨어져 죽었다. 이처럼 도요타도 제품 품질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제품결함에 대한 낙관대응으로 사상 초유의 리콜사태를 맞이해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 '이카루스 패러독스'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캐나다의 경영학자 다니 밀러(Danny Miller)는 이 신화를 이용해 기업의 최망 이유를 '이카루스 패러독스'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전의 성공요인이 이후 실패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밀러는 기업의 실패 경로를 네 가지 궤도로 유형화했는데, 그중 도요타 리콜사태와 관련된 것이 집중화 추락 궤도와 유리화 추락 궤도다. 품질을 중시하던 장인 기업이 경직된 통제와 자질구레한 사항에 집착하는 수선공 기업으로 바뀌어 폐쇄적인 기술관료적 문화를 고집하다가 부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집중화 추락 궤도다. 그리고 뛰어난 마케팅 기술과 유망 상표, 드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던 기업이 판매량에 집착한 나머지 품질과 디자인 문제를 소홀히 해 모방 제품이나 생산하는 관료주의적 표류 기업으로 변질하는 과정이 유리화 추락 궤도다.

기업은 이카루스처럼 언제나 이러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밀러의 판단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이 유혹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는 기업의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미연에 방지해 안전한 소비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제품안전표준이 세계 각국에서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강제규격으로 채택되어 부적합한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위해제품의 경우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따라 낙관대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금년 2월 5일에 효력을 발휘한 제품안전기본법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위해제품 발견시 기업에 자발적 리콜 권고, 필요시 해당 기업에



▲ 종래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인 '세이프드코리아(www.safetyskorea.kr)'에 제품명과 상표·모델명을 기재한다.



▲ 앞으로 생활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이 진행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명과 상표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기업들은 제품의 결함 등이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한 정부의 리콜명령과 언론 공표, 리콜명령 불이행시 정부의 대집행과 해당 사업자에 비용 청구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 제품안전기본법과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앞으로 생활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이 진행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명과 상표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기업들은 제품의 결함 등이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 또한 기업이 리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 당국이 리콜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징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당국은 안전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품명과 상표·모델명을 언론 등에 공표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인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에 게재한다. 업체가 제품의 위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보고는 물론이고 자발적 조치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지난 3월 기술표준원은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이 없는 국민생활 확보'를 목표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정보와 협력 확대,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 글로벌 협력 강화와 수입품 관리 내실화라는 네 가지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그 핵심 추진과제로 17가지 세부 항목이 채택되었다. 다양한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품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성조사 민간감시단인 Safety Guardian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 사후 관리와 감시체계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련 리콜사고 동향을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과 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통해 매주 분석·발표하기 시작했다.

리콜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기업이 품질과 고객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보편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법과 계획은 신선한 자극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일본의 리콜 건수는 각각 466건과 94건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29건에 그쳤다. 이 수치가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불안정한 제품이 적게 생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 통계는 오히려 자발적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조치가 반갑게 다가온다.

### 임의표준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만일 이카루스가 뛰어난 건축가이자 발명가인 아버지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처음부터 높이 날아오르지 않았거나 잠시 충고를 잊고 높이 날아올랐다가도 금세 고도를 줄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안전한 비행을 계속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즉각 수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안전기본법의 취지도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전제로 하며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법 적용에 따른 징계나 강제조치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도되는 개입일 뿐이다. 또한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보증한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의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사업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6년 관련법을 통해 안전표준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고, 일본은 검증대상 제품을 지정해 안정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제품들에게 SG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또한 제품안전과 관련해 양국 공동표준인 AS/NZS 규격을 채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1985년 기술적 조화와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을 도입해 안전성이 요구되는 제품군을 지정하고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안전감시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Safety Guard' 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계획했다. 이 제도를 제품 자체에 확대 적용해 임의표준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잘못되었을 때 신속히 바로잡는 리콜제도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6년 관련법을 통해 안전표준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고, 일본은 검증대상 제품을 지정해 안정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는 제품들에게 SG마크를 부여하고 있다.